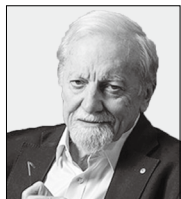


한겨레에서 시민사회 토론 공간으로 제공한 지면입니다. 한국 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의 기본을 갖추고 인신공격을 멀리하며 합리적인 논거를 담은 제의, 주장, 비판, 반론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글과 함께 이름과 직함, 연락처, 주소를 적어 보내주시시오. 정략 글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짜임으로 원고료는 드리지 않습니다. 전자우편 opinion@hani.co.kr, debate@hani.co.kr, 팩스 (02)710-0310

혼란의 세계에서 얻은 일곱가지 교훈



캐럿 에반스
전 호주 외교장관·현
아시아태평양리더십
네트워크(APLN) 국
제자문위원

오늘날 우리의 국제 환경은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시기보다도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며 암울하다. 우리는 특히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국제법, 다자주의 기구, 그리고 절차에 대한 존중이 약화하는 것을 목격해왔다.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의 침략 전쟁,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회의의 마비, 그리고 개발 원조 자금의 고갈을 보아왔다. 미국은 여러 국제기구를 탈퇴하고 무역 압박 조치를 실행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약화시켰다. 대규모 잔학 범죄에 대한 대응은 실패로 돌아갔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고, 기후 변화, 팬데믹, 핵전쟁이라는 실존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은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 핵 군비 통제에 대한 협정들은 이미 파괴되었거나 간신히 버티고 있고,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해결책도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암울한 환경을 만들어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주요국 다수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점이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는 알파한 포퓰리즘을 부추기며, 용기 있거나 정교한 정책 대응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정책 결정자들과 대중 사이에서 군사적 침략이 얼마나 자주 파국적 결과로 끝나는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은 타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과 함께 안보를 도모하는 외교와 협력을 통해 가장 잘 보장된다는 사실에 대한 망각이 우려스러운 정도로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붕괴가 구조적이고 절망적일 정도로 완벽해 보이더라도, 나는 현재와 미래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최근 역사로부터 절실

하게 배워야 할 교훈들을 흡수하고 적용한다면 이 상황이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첫째, 군사력은 반드시 승리나 지배를 보장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를 깨달았고, 미국은 이란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배웠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외교보다 무력을 앞세우다 깨달았듯, 강력한 군사력이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다.

둘째, 핵무기는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유용한 자산이 아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 우위를 활용하지 못한 사례에서 보듯, 핵무기는 상대를 강제로 굴복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억지력도 터무니없이 과장돼 있다. 이란과 대리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전혀 막지 못했다. 핵무기의 진정한 위협은 의도적인 공격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판이나 시스템 오류 가능성이다. 따라서 위험 감소 노력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이 다시 공감을 얻고 있다.

셋째, 유능함에도 힘이 있다.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의사결정은 특히 그것이 군사 행동을 개시하는 결정일 때 파국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치광이 전략'은 의사결정자가 실제로 미친 사람이 아닐 때만 효과가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는 것은 이미 가망 없는 일이며, 대결보다는 냉전식 데탕트(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접근법이라는 점을 미국 행정부도 뒤늦게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안정성'을 수용한 표현이 등장한 것은 이러한 학습 과정에 얼마간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넷째, 다수의 힘에는 저력이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외친 결집의 메시지가 명백히 보여주었듯, 세계의 중

견국들은 창의적이고 결속력 있는 연대 구축을 통해 나설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뒤, 남아 있던 파트너 국가들은 이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재탄생시켰다. 우리는 대안적 시장 진입로와 공급망을 통해 관세 폭탄에 공동으로 맞서는 모습을 목격해 왔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결속력 있는 대응, 그리고 지역에서 소다자 안보 협의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다.

다섯째, 품격에도 힘이 있다. 소프트 파워는 여전히 중요하다. 평화 구축, 잔학행위 예방, 인도주의적 대응, 빈곤 퇴치 등 좁은 이기주의를 넘어선 대의에 헌신하고, 이를 통해 '모범적인 국제 시민'으로 인정받는 것은 모든 국가의 평판과 국익에 이롭다. 이는 기후변화, 팬데믹, 핵전쟁이라는 거대한 실존적 위협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집단적 행동이 필요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여섯째, 정적에도 힘이 있다. 부패를 척결하거나 최소한 거대 자본이 정치를 과도하게 장악하는 것을 막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포퓰리즘 지도자와 정치운동에 도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헝가리에서 오르반 정권이 축출된 것이 확실한 선례가 되었고, 다른 지역에서 오르반을 모방하려는 자들의 야심을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낙관주의에도 힘이 있다. 나는 더 나은 지역 질서와 세계 질서를 재건하려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모두가 낙관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늘 믿어왔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그 변화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비판은 스스로를 무너뜨리지만 낙관주의는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

포토에세이



건축탐구 집

겉다 보니 초록색 나뭇잎 사이로 정교한 집이 나타났네요. 자칫, 안 보일 뻔했는데 밤새 내린 물방울이 지붕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 알아봤습니다. 약간 갓 같으면서 강하고 바람이 솟을 통하지만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아주 훌륭한 집이에요. 집이 너무 예쁘다고 했더니 건축주는 이 집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사냥이라고 하네요. 멋지지만 살벌한 집이었네요. 윤윤식 선임기자 yws@hani.co.kr

'한국형 갭이어' 국가정책 도입 제안

'성장의 시간' 제도로 보장하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2016년 5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큰딸 말리아가 하버드대에 합격한 뒤 입학을 1년 늦추고 갭이어(Gap Year)를 갖겠다고 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사례는 갭이어가 삶과 진로 전환의 중요한 시점을 구성하는 제도적 교육 장치임을 보여줬다.

갭이어는 정규 교육과정 또는 커리어를 잠시 중단하고, 삶과 진로에 대한 자기 탐색과 방향 설정을 위한 여백과 멈춤의 시간이다. 동시에 여행, 봉사, 인턴십, 문화 체험 등 '경험 기반 학습'을 수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제도는 1960년대 후반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현재는 유럽 전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세계 여러 교육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나는 외국과 달리 갭이어를 확대하여 ①중학교→고교 ②고교→대학 ③20~30대 청년기 등 세 시점을 아우르는 한국형 갭이어 생애주기 모델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초·중·고 전 과정이 대입을 향한 입시전쟁의 일부로 편제되어 있고, 그 결과 '멈춤 없는 경쟁' 속에 우리 아이들을 너무 오래 몰아넣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 '오디세이학교'(고교 자유학년제), 경남 '자유학교' 등 다양한 전환형 프로그램이 시도되기는 하지만, 아직 지역·계층 간 보편적 보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중학교→고교 전환기에 약 15%의 학생이, 고교→대학 전환기에 약 20%의 학생이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는 제도적 지원이 있을 때 학생들이 갭이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대학 진학 전 갭이어는 국가가 대학과 협력하여 폭넓게 권장할 수 있고, 예비 대학 교육의 의미로도 위치 지을 수 있다. 대학 입장에서, 고교 졸업생들이 여행, 인턴십, 해외 봉사활동 등을 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세상을 체험한 뒤 입학한다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거쳐 보다 풍부한 존재로서 대학 교육을 시작하게 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15~29살 청년층 중 '쉬었음'으로 응답한 인구는 약 40만명, 비율은 약 9.7%로 나타난다. 15~39살로 보면 68만명으로, 12.9%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많은 청년이 진로 불확실성과 경쟁의 피로 누적을 경험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고용시장이 좁아진 현실, 인공지능(AI)으로 인한 가파른 자동화와 로봇화의 흐름 속에서 '강제적' 쉬었음은 늘어나고 있다. 이 기간을 단순한 정지 상태로 두는 대신, 국가가 일정한 재정 지원을 하고 청년들이 자기 탐색, 공공적 가치와 사회 기여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는 국가적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오지에서의 기초학습 부진 아동 지원, 지역 청년과 함께하는 지역 재생 프로젝트, 공공 서비스 체험 및 지역사회 기여형 인턴십, 봉사 및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도 가능하다. 활동을 국내에만 한정할 필요도 없다. 오늘날과 같이 한국어 학습 열풍이 전세계로 확산한 상황에서,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 또한 하나의 중요한 교육적 과정이 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이 과거의 후진국이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기업 활동과 관계 맺기를 수행하는 중견 국가가 된 상황에서, 우리 미래 세대는 다양한 지역의 언어와 지식에 더욱 열려 있어야 한다. 이를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 프로젝트로 확대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과 체계적으로 연계한 다면 한국형 모델로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비(非)진학 청소년 대상 해외 연수 지원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제안은 후속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나, 모든 것이 대학 진학자 지원에 맞추어져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적 공정의 관점에서도 매우 유의미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갭이어를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까지 확대할 수 있겠다.

한국형 갭이어는 우리의 쉽 없는 '속도 사회'의 한가운데에서 '여백의 해'가 될 수 있다. 단순한 '휴식의 시간'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타자와 공동체를 경험하며, 공공의 가치를 몸으로 배우는 사회적 학습이 될 수 있다. 학생과 청년의 삶을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전환적 기회로서의 갭이어 제도화는 교육, 청년정책, 고용노동정책, 지역정책, 국제협력정책을 하나로 묶는, 그리하여 생애 전환기의 새로운 '사회권'을 확장하는 미래형 국가 프로젝트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헌법·유엔 헌장과 어긋나는 저작권, 당장 전환해야



고승우
80년5월 민주화투쟁
인문인회 상임대표

안구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 말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를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저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능력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은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검증을 거쳐 이뤄지는데,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면 목표 연도를 제시하게 돼 있다.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검증은 1년 내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이르면 내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무인기 역할 증대 등 현대전 양상이 크게 변한 것과 함께 북한 핵무력 강화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국방정책에서 자주 보인 변덕 등이 변수로 제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작권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등이 포함된 동맹처럼 한미 간 합의 형식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국내외 법규나 관행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급히 매듭지어야 한다. 정부는 국군에 대한 대통령의 통수권 등을 규정한 헌법에 비춰 전작권 전환이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사안이라는 점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강조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외교국방정책도 미국의 법규 속에서 이뤄지는 법치라는 점에 비추어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 밖에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와 그 부속협정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치외법권적 특수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전략적 유연성 등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한미 간에 논의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만들고 다듬은 것이어서 21세기 국제 환경에 걸맞지 않은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 속에서 주한미군은 지난 70여년 동안 미국 본토 수호를

위한 세계 전략(SIOR, OPLAN)을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수행하고 있는 점은 유엔 헌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7나라가 1나라에서 1나라를 향한 군사작전을 시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칙을 한미가 주목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의도치 않게 강대국 간 전쟁에 휩쓸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하다. 최근 서해상에서 주한미공군기와 중국기가 대치하고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한 사건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방침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미연합군 구조는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며, 전시에에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모두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에 한국군에 이미 환수됐고, 전시작전통제권만 아직 미군에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에 한미가 합의했지만 20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전작권이 한미 군 통수권 지휘권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전시에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을 지휘하는 구조라는 사실이다. 미국 법치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미국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 60만명이 한국 국익이 아닌 미국 국익에 복무하는 구조적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는 한미 두 나라의 연합 지휘체제로 주한미군사령관이 맡는 한미연합사령관 직위는 단순히 미군만의 지휘관이 아닌 한미 양국 정부의 공동 지휘를 받는 연합군 사령관이다. 즉, 한국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한국 국방부·합동참모본부의 지침도 함께 받아들이는 구조다. 전시에 한국군이 미군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연합군 전체가 한국 대통령령을 포함한 양국 정상과의 공동 전략 지침 아래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휘하는 '종속'이 아닌, '연합'의 틀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체제는 미국 대통령의 군 통수권보다 하위 개념이다. 미국의 군 통수권 체계계인 행정명령 PDD-25 등은 미국 대통

령이 국익에 부합치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의 동맹 철수나 미군 철군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몇년 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미군 철수와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언급 등이 미국 법치에 근거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에 미국 대통령의 지휘 계통 아래 놓이게 되고 미국 대통령은 미국 헌법이 보장한 군 통수권을 바탕으로, 철저히 자국의 국익을 위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릴 책무가 있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시를 내린다면, 그 지휘를 받는 한국군은 누구를 위해 복무하게 되는가? 미국의 국익이다. 미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의 일차적 책무가 미국의 국익 수호와 증진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이 미국의 국익보다 한국의 국익을 앞세워 군사행동을 결정한다면, 이는 미국 법치주의에 위배되며, 이를 명령한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해임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논리로 볼 때,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구조는 명백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 러시아 견제'라는 미국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지상과제라는 점에서 한국도 미국에 당당히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한국도 법치를 행할 책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60만 한국 장병들의安危와 국가안보에 대한 총체적 책임은 한국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74조(대통령의 국군통수권)에 따르면 국민과 영토를 보존하는 책무를 맡은 국군의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이는 곧 대통령이 철저히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국방력을 행사해야 함을 뜻한다.

현행 전작권 시스템 속에서 전시가 되었을 때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의 전작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 드러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뤄져야 한다. 이토록 중대한 안보 주권 문제가 미군이 한국군의 능력을 시험하는 형식으로 미뤄지거나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